



주간통일정세 2012-05(2012.01.23~01.2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0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김정은, 설 맞아 국가연회 개최(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설을 맞아 국가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 통신에 따르면 23일 오후 목란관에서 열린 이날 연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
- 이번 연회는 김정은 시대 첫 설을 맞아 김정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 지도부의 결속을 다지려고 열린 충성명세행사로 보임.
- 최태복 비서는 연회 연설에서 “김정일 동지에 의해 개화발전된 민족 문화를 김정은 동지가 계승하고 있다”며 “김일성 주석 100주년, 김 위원장 탄생 70주년을 성대히 기념해 올해를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해로 빛내자”고 강조
- 연회에서는 왕재산예술단의 공연이 열렸으며, 중앙통신은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맞이하는 설에 아버지 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뜻깊은 국가연회”라고 밝혀 김 위원장을 추모하기 위한 성격도 있음을 시사

● 김정은, 설 민속놀이 하도록 조치(1/24, 조선신보)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설 연휴에 예년처럼 민속놀이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4일 보도
- 조선신보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관계자들은 설 명절을 맞으며 진행해온 민속놀이를 올해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김정은 최고사령관께서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계실 때와 똑같이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민속놀이를 성황리에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 北총리 평양 건설현장 시찰(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24일 평양민속공원과 평양남새(채소)과학연구소 온실능력확장 건설장을 찾아 관계부문 일꾼들과 협의회를 열고



실패를 살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평양민속공원 건설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께 경제 현장으로는 처음 시찰한 곳으로 최 총리의 시찰은 김 부위원장의 시찰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협의회에서는 완공을 앞당기도록 과학적인 공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토의하고 건설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실무대책을 논의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 **김정은 설 맞아 만경대혁명학원 방문(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설 명절을 맞아 평양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해 교직원과 학생들을 축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1947년 김일성 주석의 고향(지금의 평양 만경대구역)에 세워진 만경대혁명학원은 혁명 유가족과 당·정 고위 간부의 자녀에게만 입학이 허용되는 특수학교이며,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권력 핵심층이 이 학교 출신임.
- 김 부위원장이 이 학교를 찾은 것은 3대 세습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지도부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 이날 만경대혁명학원 방문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박재경·현철해 대장, 리재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 황병서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수행

● **北, 20대 김정은에도 ‘어버이’ 호칭 준비?(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어버이’의 반열까지 끌어올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어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가리키는 용어지만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임.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부위원장의 만경대혁명학원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경애하는 어버이를 기다리며 촬영대에 서 있던 교직원과 학생들은...”이라며 김 부위원장을 ‘어버이’로 표현했음.
- 이 신문은 또 김 부위원장을 “우리 인민 모두에게 있어서 또 한 분의 어버이 장군님이시고 일심단결의 위대한 중심”이라고 칭송했음.

● **北, 40년간 900개 단위에 김일성훈장 수여(1/26, 노동신문)**

- 북한은 1972년 김일성훈장을 제정한 이후 40년 동안 900여개의 단위에 이 훈장을 수여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보도
- 신문은 1972년 4월 강선제강소, 성진제강소, 대안전기공장 등 100여 개의 공장·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한 이후 지금까지 900여개의 공장·기업



- 소, 농장,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이 훈장을 받았다고 밝혔음.
-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72년 3월 김일성 주석의 60회 생일을 맞아 김일성 훈장 제정에 관한 정령을 발표했다.

● **北총리, 만수대지구건설장 시찰(1/26, 조선중앙방송)**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2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 중인 평양 만수대지구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
- 최 총리는 살림집 내부 등을 둘러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받들어 건축물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에 앞서 최 총리는 김형직사범대의 개건공사 현장도 찾아 협의회를 열고 건설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했다.

● **아버지와 다른 김정은식 현지지도(종합)(1/27, 연합뉴스)**

- 북한 최고지도자 특유의 통치방식인 현지지도가 ‘김정은 체제’를 맞아 변하고 있음.
- 현지지도 및 시찰에서는 수행 간부는 김명국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원홍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 리두성 중장 등 3명이 5차례씩 수행, 군부 실세로서 확실히 이름을 알렸으며, 김 부위원장을 수행했다고 공개되는 고위간부가 매번 4~5명에 불과해 부친 때보다 확 줄어든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임.
- 김 부위원장이 현지지도에서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는 것도 시선을 끄. 김 부위원장이 격의 없이 군인들과 양쪽으로 팔짱을 끼거나 눈물을 흘리는 군인의 손을 꼭 잡는 장면이 수차례 목격됐음.
- 또 조선중앙TV가 지난 21일 방송한 제3870군부대 방문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장병과 기념촬영을 할 때 이례적으로 사복 차림의 남아가 30여 명 끼어 있는 모습이 확인됐음.

● **北총리, 용매도간석지 건설현장 시찰(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총리가 지난 26일 황해남도에 있는 용매도 간석지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했다.
- 최 총리는 건설장을 둘러보면서 공사상태와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수송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공사를 중단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북한은 2009년 12월30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용매도 1구역 간석지 1단계 제방공사를 끝냈다”며 용매도 간석지 건설소식을 처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음.



● **김정은, 또 군부대 시찰...새해들어 6곳(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중흥 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공군 제378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이 군부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 직전인 지난달 3일 김 부위원장을 대동해 찾았던 곳임.
- 김 부위원장은 또 서부지구 항공구락부(클럽) 소속 낙하산선수들의 강하 시범(모범)경기와 무선조종모형항공기 시범경기 등을 관람했다고 통신은 전함.
- 군부대 시찰과 경기 관람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 당비서, 김명국 작전국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부국장, 박재경 대장 등이 수행

● **北 김정은, 조문답전 발송...외교 무대 본격 등장(1/28,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조전을 보내온 각 국가 정상들에게 답전을 발송했음.
- 김 부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외국 정상에게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나 외교 무대에도 사실상 공식 등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옴.
- 조선중앙방송은 28일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일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조전을 보내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셨다"며 "심심한 애도와 진심 어린 위문의 뜻이 담긴 조전을 보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 답전 대상은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쿠바,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시리아,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수십 개 국가의 대통령과 국왕, 당 대표 등임.
- 중앙방송이 밝힌 답전 대상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 부위원장이 이미 류홍차이(劉洪才) 북한주재 중국대사 등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답전을 발송했거나 앞으로 별도로 답례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옴.

● **北, '김정은 편지' 공개...준비된 軍지도자 부각(1/2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28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충성맹세'를 담은 편지를 공개하며 김 부위원장이 '준비된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했음.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최고사령관, 그 성스러운 부름 앞에'라는 글에서 "(김 부위원장이) 그 성스러운 부름 앞에서 얼마나 뜨거운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감동



깊은 이야기가 있다”며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편지 내용을 소개

■ 김정은 동향

- 1/23 김정은 부위원장, 1.23 설명절 즈음 국가연회(목란관) 마련 (1.23,중통·중·평방)
 - 김영남·최영림·김영춘·김기남·최태복·양형섭 등 참석
- 1/25 김정은 부위원장, 설명절 즈음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여 교직원·학생들 축하(1.25,중통·중방)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軍 차수), 박재경·현철해(軍 대장들), 이재일(黨 제1부부장), 황병서(黨 부부장) 동행
- 1/28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공군 제378군부대 비행훈련 지도(1.28,중통·중방)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黨비서), 김명국·김원홍·박재경(軍 대장들), 軍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동행
- 1/28 김정은 부위원장, 서부지구 항공구락부 선수들의 모범경기 관람(1.28,중통·중방)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黨비서), 김명국·김원홍·박재경(軍 대장들)이 함께 관람
- 1/28 김정은 부위원장, 쉰위원장 사망 관련 조전을 보내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에게 답전(1.28,중방)
- 1/29 김정은 부위원장, 인민군 군악단 연주회 관람(1.29,중통·중방)
 - 리영호,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장성택, 박도춘, 우동측 등과 함께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내각총리, 1.24 ‘평양민속공원건설장과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온실건설장 현지요해(1.24,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1.25 김형직사범대학 개건공사 및 만수대지구 건설정형 현지요해(1.25,중통)
- ‘김일성훈장’ 제정(72.3.20, 최고인민회의 ‘정령’) 이래 지난 40년간 “900여개 단위에 훈장 수여” 선전(1.26,중방)
- 최영림 내각총리, 1.26 ‘용매도 간석지 건설장’ 현지 요해(1.27,중통)



나. 경제

- **美, 작년 대북수출 승인 10배↑(1/24,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정부가 2011 회계연도에 23건의 대북수출을 승인했으며 총 대북수출 규모가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함.
 -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은 지난 20일 공개한 '2011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승인된 대북수출은 총 23건, 약3천830만 달러 규모로 전년도 310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미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물품 대부분은 인도주의 지원물자로 전체 규모의 99.8%인 3천826만 달러 상당은 식량 및 의약품이라고 강조
 - 인도주의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0.2%(약 8만7천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용 발전기나 정보보안장치, 일반용 전기장치 등으로 BIS의 수출 심사를 통과하고 북한으로 수출됐음.

- **유니세프, 北영유아 80% 이상 영양실조(1/25,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5일 입수한 유엔아동기금(UNICEF)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중 급성 영양실조와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비율이 각각 14.9%와 2.9%로 전체 영양실조 아동 비율은 17.8%로 집계됐음.
 - 지역별로는 양강도의 급성 영양실조 16.3%, 중증 급성 영양실조 3.2%로, 전체 영양실조 아동 비율(19.5%)이 가장 높았음.
 - UNICEF는 지난해 11월 말 북한 보건성의 협력 아래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등 4개 지역에 의사 1천여 명을 파견, 6개월 이상 영아부터 5세 미만의 전체 아동(20만 여명)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18만 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실태를 조사했음.

- **평양 '광복지구쇼핑센터' 北유통 변화 이끄냐(1/26, 조선신보)**
 -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사망 이틀 전인 지난달 15일 현지지도한 이곳을 김 위원장의 '마지막 현지지도 장소'로 선전하면서 이 쇼핑센터를 비중있게 띄우고 있음.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5일 '마지막 현지지도 광복지구상업중심, 사회주의 수호자가 돌아본 인민적 시책의 현장'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광복지구상업중심의 운영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 조선신보는 "현재 매장에는 국산품과 수입품이 대체로 4대 6의 비율로 진열됐다"며 "중국의 비해 몽신유한공사를 합영대상으로 정해 수입품 납입의 효율화를 실현했고 상품의 품종도 대폭 늘렸다"고 소개
 - 조선신보는 "가격은 시장의 가격보다 낮게(싸게), 다른 국영상점의 가격보다 높게 설정했다"며 "차액부분은 조선대성무역총상사의 경성비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 **北, 후진국형 무역구조로 후퇴<유엔보고서>(1/26, 미국의소리(VOA) 방송)**

- 북한의 전체 수출입에서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등 무역구조가 후진국형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전했다.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발표한 ‘2011년 통계핸드북’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11.5%에서 2010년에는 44.5%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제조업 제품의 수출 비율은 69.3%에서 49.4%로 20%포인트 가까이 줄었으며, 수입에서 원유 등 연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18.6%에서 25.9%로 증가했음.
-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도 선진국 중심에서 개발도상국 위주로 변했으며, 수출의 경우 1995년 선진국이 차지한 비율이 52.5%로 절반을 넘었지만 2010년에는 5.6%에 불과, 반면에 1995년 45.6%였던 개발도상국의 비율은 2010년에 92.7%로 급증
- 수입에서도 선진국 비율이 35.6%에서 1.9%로 줄었고, 개발도상국 비율은 54.5%에서 96.7%로 늘었음.

● **北, 황해남도에 대규모 수로 건설 착공(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황해남도에 대규모 ‘자연흐름식 물길(수로)’이 새로 건설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자연흐름식 물길은 취수장에서 정수장, 배수지 등으로 물을 보내는 과정에 가압펌프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임.
- 중앙통신은 “이 물길건설은 김정일 동지와 김정은 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대자연 개조사업”이라며 물길이 완성되면 웅진·강령·벽성군 등에 있는 농경지와 간척지, 논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해주시에서 열린 물길 착공식에는 최영림 내각총리와 김기남 당비서, 성, 중앙기관 일꾼, 건설자, 근로자 등이 참석

● **北 지도부, 북한경유 가스관 약속(1/27, 모스크바 이타르타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들어선 북한의 새 지도부가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 한국으로 이어지는 천연 가스관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음.
- 모스크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세르게이 슈마트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25일 저녁(현지시간) 취임 인사 차 에너지부를 방문한 러시아 주재 위성락 한국대사와의 면담에서 “북한 새 지도부가 이 프로젝트(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현재 가장 핵심적 과제는 가스 가격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는 수개월간 가스관 프로젝트에 관한 교섭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9월 15일 사업 추진 일정을 담은 로드맵에 서명했으며, 이와 별도로 가스프롬은 같은 날 북한 원유공업성과도 가스관 건설 사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 등의 합의를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 北, 식량배급량 작년 10월부터 증가세(1/29, 연합뉴스)

-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29일 “세계식량계획(WFP) 북한사무소 관계자에게 이달 1인당 식량배급량이 395g으로 지난달보다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음.
- WFP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배급량은 작년 4월 400g에서 춘궁기인 5월 190g, 6월 150g으로 줄었고 7~10월 200g에 불과했지만 추수 이후인 10월에 355g으로 늘어난 뒤 12월까지 매달 10g씩 증가했음.
- 이달 배급량은 전달보다 20g이나 많은 것으로, 북한 당국이 작년 말 WFP에 전달한 자료에서 올해 계획이라고 밝힌 380g보다 15g이 많고, 북한의 배급량이 이같이 늘어나는 것은 작년 가을 곡물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30만~40만가량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黃南道에 ‘자연흐름식물길’ 건설(웅진·강령·벽성군 등) 착공식, 1.26 최영림(내각총리)·김기남(黨 비서) 등 참석하 해주시에서 진행(1.26,중통·중방)

다. 군사

● 김정일 사후 북한군 훈련규모 변화없어(1/24, 연합뉴스)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4일 “11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공군 전투기 훈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음.
- 군당국은 북한군이 국가지도자 교체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전투기는 동계훈련이 시작된 이후 이·착륙 비행과 원거리 비행훈련 횟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으며, 북한군은 전시에 대비해 군 보관시설에만 150만t의 전시용 유류를 비축해 놓고 있음.
- 소식통은 “북한 전투기는 황해도 상공에 설정된 전술초치선(TAL)에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라. 사회·문화

- **北 리춘히 “부드럽고 말하듯이” 혼수(1/23, 로이터통신; 중국중앙(CC)TV)**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해 세계인의 이목을 붙잡았던 북한 조선중앙TV 앵커 리춘히(68.여)가 중국 TV에 등장했다고 전함.
 - 중국중앙(CC)TV는 리춘히 앵커가 춘제(春節·설)를 맞아 평양 조선중앙 TV 스튜디오를 찾아온 중국의 취재진에게 앵커의 자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장면을 녹화해 방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

- **AP통신, 北의 설풍경 ‘평양발’ 기사·영상 송고(1/24, AP통신)**
 - 설을 맞은 북한의 표정을 전하는 AP통신의 평양발 기사가 23일 송고됐음.
 - AP통신은 ‘생기넘치는 북한의 수도가 음력 설을 축하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설을 맞은 평양의 모습을 전했다.
 - 지난 16일 평양에 ‘종합지국’을 개설한 이후 본격적으로 북한 소식을 전하는 신호탄이었으며, 이 기사는 AP통신의 평양지국 취재 기자로 임명된 박원일 기자 명의로 작성
 - AP통신은 이 기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을 추모하기 위해 23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 대거 나왔다면서 새해를 맞아 형형색색의 꽃과 어린이들의 게임으로 북한 주민들이 설을 축하했다고 소개
 - 또 지난 수주간 황량하고 어둡침침했던 평양이 다시 여러 색으로 채워졌고, 여러 건물과 벽에는 ‘설명절’을 축하하는 포스터와 간판들이 내걸렸다고 보도

- **민간단체 대북 인도지원 재개 ‘기지개’(1/24,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사로 중단됐던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양상임.
 -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지원 단체인 남북평화재단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대표자회의로부터 기탁받은 기금으로 구입한 1억원 상당의 밀가루 180t을 27일 황해도 개풍군과 장풍군 등의 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와 탁아소 등에 전달할 예정임.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평안남도 안주시에 대한 밀가루 잔여분 지원과 모니터링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도 “경기도와 함께 하는 말라리아 방역지원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만나자는 팩스를 이미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 보냈다”며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는 대로 방북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 고구려고분 소나무숲 병충해 방제 'SOS'(1/24, 연합뉴스)**
 - 북한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군 일대 소나무숲에 대한 병충해 방제 작업을 지원해달라고 남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북한 고구려 고분군 일대 소나무숲에 대한 병충해 방제 지원을 추진 중”이라면서 “북측이 당초 남측의 다른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 이 관계자는 “소나무숲이 훼손되면 세계문화유산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 작업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통일부와의 조율 작업이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 북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은 고구려 고분군이 유일하며 백두산, 묘향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음.

- **北, 김정일 애도기간 탈북 전시범죄로 처벌(1/25, 좋은벗들)**
 -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애도기간(100일) 내에 발생하는 불법 월경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전시범죄로 규정해 처벌기로 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25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39호)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최근 중앙당이 국경지역에서 김 위원장 애도기간 안에 불법적인 도강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전시범죄로 간주, 처벌한다는 지시문을 각 도당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 **WHO, 北서도 금연운동 활발(1/26,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도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조치를 강화하는 등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이 지난해 4월 담배의 위해성을 경고하는 WHO의 보고서를 번역해 관련 부서와 의료 상담가, 보건 전문가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 WHO는 평양에 있는 금연센터에서는 북한이 자체 개발한 금연약을 판매하고, 백화점과 병원 등 공공장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됐으며, 담배꽂이를 재떨이에만 버리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

- **인천유나이티드, 김정일 사후 첫 남북 체육교류(1/26, 연합뉴스)**
 -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남북한 유소년 축구팀이 참여하는 ‘2012 인천평화컵 국제 유소년(U-14) 축구대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인천 구단의 유소년팀인 광성중학교를 비롯, 북한 4·25축구단 유소년팀, 중국 윈난성 선발팀, 일본 프로축구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유소년팀 등 4개국 대표팀이 출전함.



- 4·25유소년팀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대회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섭외 과정에서 흔쾌히 대회 초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대회를 후원하는 인천시는 4·25유소년팀의 참가에 따라 4·25성인 축구단의 인천 초청 친선경기가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오는 3월 1일 북한 4·25축구단을 인천으로 초청, 인천유나이티드와 인천 송의축구전용구장 개장 기념경기를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임.

● **美국방부 유해발굴 조사단 3월 방북(1/27, AP통신)**

- 미국 정부가 오는 3월 미군 유해발굴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26일(현지시간) 보도
-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의 래리 파커 공보관은 이날 “북한군이 3월초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소수의 미군 선발대가 3월 중에 방북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발굴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앞서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도 지난 1월 17일 리처드 루거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유해발굴 작업을 3월 1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탈북여성 2명 올해 첫 美 입국(1/27, 미국의소리(VOA) 방송)**

- 태국에 머물던 탈북 여성 2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지난 21일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전했다.
- 이로써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들어간 탈북자는 128명으로 늘어났다.
- 20대 초반의 자매인 이들은 2010년 가을 북한에서 탈출해 그해 12월 태국에 도착했고, 3년 전에 먼저 미국에 들어간 아버지의 도움으로 미 남부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작년 대북 인도적지원 51.5% 감소(1/27, 연합뉴스)**

- 통일부는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이 196억원으로 전년의 404억원보다 51.5%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 이 가운데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65억원과 13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1%와 34.5% 감소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 65억원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대북 영유아사업에 지원됐음.
- 민간차원에서는 35개 민간 지원단체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밀가루, 의약품, 분유, 두유 등을 131억원 규모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량은 총 7천119t으로, 금액기준으로 37억9천만원에 이룸.



-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지난 한 해 남북교역액은 17억1천386만달러로 전년의 19억1천225만달러보다 10.4% 줄었음.

●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첫 밀가루 대북지원(1/27,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밀가루 지원이 이뤄졌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
- 남북평화재단은 2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앞에서 ‘대북 밀가루 지원단 출정식’을 열었음.
- 남북평화재단의 한 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중단된 인도적 대북지원을 다시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밀가루 지원으로 남북대화가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2. 대외정세

가. 일반

● **日 ‘北日 정상회담’ 언급…실현가능성 있나(1/26, 산케이신문)**

-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은 지난 24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종적으로 (일본)총리와 대화하길 바란다”며 “그 전제가 될 토대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음.
- 그는 또 북한이 이른바 ‘김정은 체제’로 이행한 덕에 일본인 피랍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지적한 뒤 “내가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면 위와 아래에서 다양하게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일본은 실제로도 북한과 ‘다면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

● **러 외무, “北, 이상기미 없이 평온”(1/27, 이타르타스·리아노보스티; 교도통신)**

- 러시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한 달이 지난 북한에 불안정한 기미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 밝혔음.
- 라브로프 장관은 오는 28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날 모스크바에서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북한 정세에 대해 “내가 아는 한 북한의 상황이 평온하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 전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음.
- 또 라브로프 장관은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북한의 당과 정치, 군부의 최고지도자로 옹립된 것과 관련, 북한의 새 지도부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으며, 러시아가 북한의 이웃국가로서 정치와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北, 기업활동 위험국가 3위(英보고서)(1/27,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의 기업자문회사 ‘메이플크로프트(Maplecroft)’가 북한을 미얀마, 소말리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국가로 설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했다.
 - 메이플크로프트는 25일 공개한 ‘2012년 법과 제도화 환경 위험’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체 평가 대상 173개국 중 세번째로 기업활동의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했으며, 보고서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 법 적용의 공정성을 21개 항목으로 분류해 이를 기준으로 173개국을 평가했는데, 북한은 21개 평가 항목 중 공정한 법 적용, 정부의 지원, 제도 정비, 재산권 존중 등 17개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 한편 북한은 지난 12일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동 집계해 발표한 ‘2012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17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음.

- **北 송일호 대사, “訪中 기간 日 접촉 안해”(1/28, 연합뉴스)**
 - 북한의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28일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간의 방중 기간에 일본 의원이나 관리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송 대사는 이날 평양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일본 측과 접촉하지 않았다”고만 했을 뿐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으며, 북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송 대사는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다”며 “노다 요시히코 정부 주변의 전개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의 ‘新 국방전략’ 관련 “미국이 자기의 침략적 본성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아·태지역중시 내용에 대해 “새로운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열점지대로 되고 있다”고 우려 및 “침략성과 호전성, 지배주의적 야욕으로 하여 파멸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난(1.27, 중통·노동신문·중방·우리민족끼리/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의 위험성//평방, 감출 수 없는 침략자의 본색)



나. 6자회담(북핵)

■ 기타 (6자회담(북핵))

- 미국은 ‘駐韓美軍에 핵무기 반입(‘58.1.29), 조선반도 핵문제 장본인’이라며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여부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달려 있다”고 주장(1.29, 평방/미제는 조선반도 핵문제의 장본인)

3. 대남정세

● 작년 개성공단 생산액 14.4% 증가(1/23, 연합뉴스)

-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개성공단 생산액은 3억6천986만 달러로 2010년 전체의 3억2천332만달러보다 14.4% 증가했음.
- 아직 집계되지 않은 12월까지 더해지면 생산액 증가율은 더 커질 전망이다, 1~11월까지 생산액은 전년보다 25.7%나 늘어났기 때문임.
- 개성공단 월평균 생산액은 올해 1월 3천105만달러를 돌파한 뒤 2월(2천535만달러)를 제외하고는 모두 3천만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생산액 증가는 노동집약적인 개성공단 특성상 꾸준히 증가하는 북측 근로자 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북측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4만8천70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2010년 말 4만6천284명에서 거의 1년 사이에 2천424명이 늘어났음.

● NCKK, 강영섭 조그련 위원장 사망에 조문(1/23, 연합뉴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는 북한에 조문을 보내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사망을 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 개성공단 北근로자 설연휴 직후 늘린다(1/24, 연합뉴스)

- 개성공단 관계자는 24일 “북한의 설 연휴 직후인 26일께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가 400명 정도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통일부 관계자도 “북측이 조만간 개성공단 근로자를 증원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음.
- 이번에 공급되는 북한 근로자들은 후발업체들을 중심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전했다.

● 개성공단 별점제..출입제한 조치 가능(1/25,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서 각종 사건·사고로 문제를 일으키는 남측 관계자에 대한 별점제가 도입되고 별점 누적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뉴스가 25일 전함.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지침에 따르면 공단 내에서 교통사고나 화재, 폭행 등 사건·사고를 유발하는 남측 관계자에 대해 별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누적 별점이 10점 이상이면 개성공단에 대한 ‘영구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9점 3개월, 7~8점 2개월, 5~6점 1개월, 3~4점 2주 등의 출입제한이 가해짐.

● **北, 한미 쌍룡훈련 맹비난…철회 요구(1/25,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5일 올해 예정된 한국과 미국의 각종 군사훈련계획을 ‘북침전쟁계획’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
- 이 매체는 이날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계획’이라는 논평에서 한미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 등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의 반공화국 대결광기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한다”고 비난
-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는 오는 3월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을 하기로 합의 했으며, 우리 군은 미군이 2월과 7월 각각 태국과 하와이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도 참여
- 특히 쌍룡훈련은 1989년 팀 스피리트훈련 이후 23년 만에 시행되는 최대 규모의 해병 연합상륙훈련으로 알려졌다.

● **하나원장 직제 격상..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1/26,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정착교육을 전담하는 하나원장을 기존 고위공무원 나급에서 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 류우의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와 함께 분단 이재민이라고 표현해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통일부는 하나원장 직제 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임.

● **北, 서해 사격훈련은 침략전쟁연습(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우리 군이 이날 서북도서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을 “앞에서는 대화를 바라는 듯이 여론을 내돌리고 돌아앉아서 는 침략전쟁연습으로 연평도 포격사건 사태를 재현하려 한다”고 비난
- 통신은 또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 북측 영해에 대고 선불질했다가 불벼락을 맞은 데 양심을 품은 이명박 역적은 기회를 노려왔다”며 “그리 하여 조선 서해 5개 섬에서 북침공격연습이 전에 없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 해병대는 이날 오전 K-9 자주포와 20mm 벌컨포, 81mm 박격포 등을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발사하며 2시간가량 사격훈련을 했으며, 전방지역에서 사격훈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이번이 처음임.



● 6·15남측위, 북측위에 회동 제안(1/27,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27일 남북교류 재개 등을 위해 2월초 중국 선양에서 만날 것을 북측 위원회에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남측위는 중국을 통해 북측위에 보낸 팩스에서 “남북교류 재개와 올해 민족공동 행사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
- 또 “장소는 중국 선양으로 하고, 2월 초경 귀측이 편리한 일정에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6·15민족공동위의 단합과 정상화 문제,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등의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통일부·단체 ‘보건의료품 대북지원’ 신경전(1/27, 연합뉴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평양시 락랑구역 소재 정성의학종합센터(정성제약공장)에 대한 의약품 검사용 시약과 품질관리용 필수 소모품에 대한 반출 승인을 통일부가 불허했다”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했음.
- 단체 측은 “정성의학종합센터는 북한 주민에게 공급되는 수액제(링거액)와 기초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공장”이라면서 “이번 반출 불허조치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인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통일부는 지원 품목과 수혜 대상, 분배투명성 등을 이유로 “승인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품목이 의약품이 아니고 시약과 소모품”이라면서 “지원 품목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김정일 사후 한달 넘게 침묵하는 北대남기구(1/29, 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가 가동한 지 한달이 됐지만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이 남한단체의 제안에 반응하거나 먼저 연락하는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
- 한 대북소식통은 “최근 일부 단체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간접적으로 연락했는데 북측 관계자가 ‘아직 상부에서 (대남사업과 관련해) 명확한 지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기타 (대남)

-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태호 임명은 “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족대결에 미친 자들의 필사적 발악”이라며 “이○○패당은 절대로 대화상대가 될 수 없다”고 지속 비난(1.23, 중통·노동신문/대결광신자의 필사적 발악)
- 대통령 신년국정연설 및 통일부장관의 對北발언(기회의 창)과 김정일 위원장 사망관련 我 정부의 대응조치 등을 재차 거론하며 ‘북남 관계 파탄의 책임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속 비난(1.24, 중통·노동신문/관계개선의 기회는 누가 차버렸는가)
-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해병대 해상사격훈련’ 관련 ‘잦은 불장난질로 정세를 격화, 기회를 엿보다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것’이라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1.27, 우리민족끼리/열점지역에서 노리는 목적은)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1.28)】 韓美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2.27~3.9) 실시 관련 ‘北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최초 비난하며 ‘불상사가 난 집에 불뿜치를 들고 달려드는 날강도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 위협(1.28, 중통/무모한 불장난 소동)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러' 연해주서 남·북·美 외교대표 함께 설맞이>(1/27)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한 및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남북한과 미국 3국 외교대표들이 함께 설맞이 행사에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2일 연해주 지역 고려인(토착 한인) 협회 발렌틴 박 회장이 마련한 설맞이 행사에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이양구 한국 총영사와 데이 김 미국 총영사, 나훗카 주재 심국룡 북한 총영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행사는 이날 저녁 연해주 주도(州都)인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아르타옴시(市)의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연해주 지역의 설맞이 행사는 현지 고려인 협회가 매년 추진해 오는 것으로 이 자리에는 통상 고려인들을 비롯해 남북한 총영사가 협회측의 초청으로 참석해 왔으나 올해는 재미교포인 미국 총영사도 자리를 함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데이 총영사는 약 4개월 전 부임했으며 한국말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심 총영사는 당초 김정일 위원장 조문 분위기 등으로 행사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려인 협회 측에 전해왔으나 행사 당일 뜻밖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발렌틴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모임은 남북한과 미국 간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한 상징적 사건”이라며 남북미 3국 외교대표 회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심 총영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나훗카 총영사관의 조문소를 찾았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현재 북한은 후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면서 올해 남북 통일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공식 인사말을 끝낸 심 총영사는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의 질문에 간단히 대답했을 뿐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여서 남북미 외교 대표들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심 총영사가 노래와 춤, 연주회 등으로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행사장에서 약 3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행사가 끝나기 전 먼저 자리를 떴다고 덧붙였다.

● “북핵 6자회담 재개에 큰 난관 없어” 러' 외무(1/27)

- 현재 북한 상황은 안정돼 있으며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일본,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순방에 앞서 현지 유력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한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6자회담 재개 과정에 어느 정도의 차질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한 상황은 안정화돼 있으며 새해 직전에 북한 지도부는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면서 “우리는 이를 북한 새 지도부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도출된 모든 양자 및 다자간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 라브로프는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 앞서 3년 동안 지속됐던 협상 과정의 중단을 극복하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은 북한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 간의 신뢰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국제법적 장치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것으로 믿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화 재개 움직임에 러시아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사전 조건없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설득한 것이 바로 러시아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8월 시베리아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북핵 협상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음. 라브로프는 이어 “러시아는 북한과의 우호 관계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 새 지도부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길 기대한다”며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동양의 격언도 있다”고 소개했음.
- 이날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한 달이 지난 북한에 불안정한 기미가 없다고 평가했음. 라브로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황은 안정적이며 불안정한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될 징후가 없다”면서 “권력의 순조로운 승계가 이루어졌으며 애도 행사들이 끝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협상 과정을 재개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들이 긴장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행동에서 최대한의 균형감과 자제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이웃국가로서 정치와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다고 거듭 밝혔음.

● “北, 국제사회 우려 해소 제스처 취해야”(1/28)

- 북한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8일 촉구했음.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중인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접촉 과정에서(이 같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음. 북한이 6자회담 재개 협상 과정에서 일정한 양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북한 지도부 교체는 평양에서 새로운 권력 실체가 형성되는 휴식기로 이어졌다”며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이 곧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음. 그는 “우리는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 대외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한 전(前) 지도자 김정일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6자)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발언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음.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음

나. 미·북 관계

● 美, 작년 대북수출 승인 10배↑(1/24)

- 미국 정부가 2011 회계연도에 23건의 대북수출을 승인했으며 총 대북수출 규모가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했다.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은 지난 20일 공개한 ‘2011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승인된 대북수출은 총 23건, 약 3천830만 달러 규모로 전년도 310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음. 보고서는 미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물품 대부분은 인도주의 지원물자로 전체 규모의 99.8%인 3천826만 달러 상당은 식량 및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주의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0.2%(약 8만7천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용 발전기나 정보보안장치, 일반용 전기장치 등으로 BIS의 수출 심사를 통과하고 북한으로 수출됐음. BIS의 유진 커틸리 대변인은 “북한을 포함한 22개의 수출통제국(Export Controlled Countries)에 물자를 수출하려면 BIS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식량과 의약품으로 한정된 인도주의 지원품을 제외한 모든 대북 수출품이 심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2011 회계연도에 약 840만 달러에 해당하는 14건의 대북수출 신청이 기각됐으며 대부분이 한국으로 수출할 물자를 수출업자들이 실수로 북한으로 표기한 경우였다고 덧붙였음.

● “미국방부 유해발굴 조사단 3월 방북”(1/27)

- 미국 정부가 오는 3월 미군 유해발굴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2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합의된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의 래리 파커



- 공보관은 이날 “북한군이 3월초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소수의 미군 선발대가 3월 중에 방북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발굴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앞서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도 지난 1월 17일 리처드 루저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유해발굴 작업을 3월 1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양측은 지난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북핵 6자회담 재개 및 대북 식량지원 등과 관련한 대화를 중단했으나 이번 유해발굴 작업은 인도적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유해발굴 작업과 관련, “양측간 다른 현안과 무관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 미 정부는 1996년부터 10년간 북한에서 33차례의 작업을 통해 220여구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지만 지난 2005년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인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굴 작업을 중단했다. 6·25 전쟁으로 실종된 미군과 전쟁포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7천977명이며, 이 가운데 약 5천500이 북한지역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됨.

다. 일·북 관계

● <日 ‘北日 정상회담’ 언급…실현가능성 있다>(1/26)

- 새로 임명된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림.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은 지난 24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종적으로(일본)총리와 대화하길 바란다”며 “그 전제가 될 토대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이른바 ‘김정은 체제’로 이행한 덕에 일본인 피랍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지적한 뒤 “내가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면 위와 아래에서 다양하게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 말은 그야말로 일본이 관심을 쏟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일 정상회담까지 시야에 넣고 다양하게 실무접촉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마쓰바라 담당상은 지난 20일 교도통신 등과 인터뷰에서도 “(북한과의) 외교는 일원적이지만, 접촉은 다면적으로 하지 않으면(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음.
- 일본은 실제로도 북한과 ‘다면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 지난해 11월 북일 국교정상화 추진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북일축구 시합 관전을 내세워 방북하려다 포기한 적이 있고, 지난 9일과 10일에는 나카이 히로시(中井裕) 전 납치문제담당상이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한의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를 비밀리에 만났음. 당시 나카이의 방중에는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직원이 동행했음.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이 6월쯤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시행하기 전에 북일정상회담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음.

- 일본에 있는 대북 전문가들의 관측은 엇갈림. 한 전문가는 “북한이 올해 안에 바뀔지 모르는 일본 민주당 정권과 큰일을 벌일 리 없고, 민주당 정권도 북일관계 외에 신경 쓸 일이 많다”며 “마쓰바라의 발언은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음.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나카이-송일호 접촉에 대해 “정부 차원이 아닌 비공식적인 접촉”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나서 “앞으로 북한과 교섭이 있게 되면 내가 정부 대표로 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해석과 관련됨. 아직 외무성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데 주목한 관측임.
- 하지만 ‘일본이 외무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무성과 납치문제대책본부 양쪽으로 대북 접촉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며 이른바 ‘투트랙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음. 이같이 풀이하는 한 전문가는 “외무성이 뒤로 빠진 채 납치문제대책본부나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한미일 공조를 깬다’는 비난을 의식한 이중 플레이일 뿐”이라고 지적했음. 일본 정치인들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방북해 북측으로부터 ‘일본인 납치 사실 인정’이라는 성과를 끌어내고, 일부 납치 피해자를 귀국시킨 경험에서 ‘북일관계는 잘만 다루면 정권 지지율 반등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임. 북일 관계에 정통한 다른 전문가는 “일본이 중의원 총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부 교체라는 ‘호재’를 그냥 넘길 리 없음. 정상회담까지는 몰라도 다양하게 접촉을 시도하리라는 건 분명하다”며 “다만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민주당 정권을 대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음.

라. 기 타

● 보즈워스 “김정은 실권 장악 가능성 작아” (1/24)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전(前)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3일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의 실권 장악을 의문시하며 외교 재개 가능성을 낮게 관측했음. 보즈워스 전 대표는 이날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외교적으로, 올해는 꽤 조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음. 그는 2009년 6자 회담을 중단한 북한이 취할 수 유일한 선택은 외교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음. 그는 북한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집단적인 체제라며 북한 지도자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집단적 자살 행위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음. 군 장성이나 당 고위 관리들이 김정은에게 김정일이 가졌던 수준의 권력은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는 “그들은 명목상의 지도자로 김정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들은 왕국에 얼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북한과 사이버 종교집단을 비교하면서 “나는 북한을 정치적인 실체라기보다 종교집단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다”며 “북한인들은 두 살 때부터 주체사상을 배우고 지도자를 존경하면서 자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은 이제 이웃 나라 국민들과의 생활수준 차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공군, 美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1/25)

- 공군 최신예 전투기 K-15K가 미 공군이 실시하는 최대규모 공중전 훈련인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에 참가한다고 공군이 25일 밝혔다. 미 네바다주 벨리스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레드 플래그 훈련은 지난 22일 시작돼 다음달 4일까지 실시됨. 공군 전투능력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 주 방위군의 항공전력이 참가하는 레드 플래그 훈련에는 비정기적으로 동맹국이 합류하기도 함. 한국 공군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7차례 참가했음.
- 1976년 시작된 이 훈련은 ‘블루에어’와 ‘레드에어’로 나눠 가상 대결을 벌이는 형태로 이뤄짐.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 공군이 참여함. 미 공군에서는 F-15F-16 전투기, B-1 폭격기, E-3 조기경보기, KC-135 공중급유기 등이 참가함. 한국 공군에서는 제11전투비행단 소속 최신예 전투기 F-15K 6대가 훈련기간 1일 6소티(차례)씩 총 58소티를 출격함. F-15K의 임무는 MiG-23/29, Su-27/30 역할을 맡은 가상적기인 미 공군의 F-16/15와 공중전을 벌여 이들을 요격한 뒤 방공 미사일 위협을 피해 적진에 침투, 지상목표를 공격하는 것임. 또 항공차단과 근접항공지원작전 등 고난도 연합작전을 수행하며 레이저유도 폭탄, 합동정밀직격탄(JDAM), 레이저유도 JDAM 등 첨단 무장 실사격 훈련도 실시함.
- 훈련에 투입된 F-15K는 미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보잉사 공장에서 수락 절차를 거쳐 공군이 직접 인수해 훈련에 투입됐음. 훈련단장 윤재훈 대령(11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영공방위 능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공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조종사의 실전적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불변” 재확인(1/25)

- 미국은 25일 신(新)국방전략 지침 채택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음. 미군 당국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템프시 미 합참의장간 회담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참의 한 고위관계자가 밝혔음.



- 지난 22일 미국을 방문한 정 의장과 템프시 의장은 회담에서 미국의 신 국방전략 지침 채택에 따른 대(對)한반도 전략 및 전력 운용과 아시아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했음. 양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국지도발 공동대비 계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D)에 서명했음. 양국 의장이 SPD에 서명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내달 초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은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에 서명하며, 대비계획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됨.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은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주일미군과 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 전력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어 정 의장은 레이먼드 오디에르노 미 육군총장과 조너선 그리너트 해군총장, 놀턴 슈워츠 공군총장, 제임스 아모스 해병대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와 각각 만나 양국 군사현안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음. 정 의장은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연구실장 등 안보전문가들과도 만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은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방문, 로버트 켈러 전략사령관(공군대장)과 미국의 핵 확장억제정책의 공고함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 한편 한미는 내달 27일부터 2주간 ‘키 리졸브’ 연합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음. 키 리졸브 연습에는 사단급 이상의 한국군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이 참가하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연습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번주 키 리졸브 연습 일정을 북한에 통보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임.

● 한미, 내달 27일부터 키 리졸브 훈련 돌입(1/27)

-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 숙달 등을 위한 ‘키 리졸브’ 연합연습이 내달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다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7일 밝혔다. 이번 연습은 외국에서 전개되는 8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천100여명과 한국군 20만여명이 참가해 예년 수준으로 실시함.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회원국인 영국과 호주,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의 일부 병력도 옵서버로 참가함.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파견하는 감독관들도 연습을 참관함.
- 연합사는 이날 오전 11시15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마이크를 통해 연습 일정 등을 북한측에 통보했음. 키 리졸브 연습은 유사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절차를 연습하는 정기적인 훈련으로, 현 한반도 정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연합사는 설명했다. 제임스 서먼 연합사령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된 훈련”이라면서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협을 가정해 시행된다”고 말했다.
- 특히 서먼 사령관은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접근 방식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고 강조, 북한의 급변사태와 같



은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연습도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음. 또 한미 아외 전술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됨. 독수리연습에는 미군 1만1천여명(외국주둔 미군 1만500명 포함)과 사단급 이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해 지상 기동과 공중·해상·원정·특수작전 훈련을 함. 서면 사령관은 “한미 양국군이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례적인 아외 전술기동훈련”이라면서 “이 연습은 방어위주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키 리졸브연습과 독수리연습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매년 비난하고 있음.

● 美사령관 “주한미군 운용 큰 변화 없다”(종합)(1/28)

-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새로운 국방전략으로 인해 주한미군 운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윌러드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주한미군의 운용 변화 가능성 등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 병력수에 언급, “이는 오랜 기간 한미간 논의와 대화의 주제로, 현재 약 3만명 수준으로 합의돼 있다”면서 “이는 양국간 강력한 동맹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 특히 그는 “(주한미군의 숫자는) 전반적으로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고려한 것이지만 지역적인 수요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지난 26일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예산 감축 및 육군병력 감축을 발표하면서 “육군은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의미있는 병력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됨. 윌러드 사령관은 다만 “한국과 매년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주한미군의) 숫자와 운용 등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음.
- 이어 윌러드 사령관은 지난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북한 권력승계 과정과 관련, “한반도에서 우리의 주요 목표인 안정이 유지되고 (북한의) 권력승계가 무난하게 진행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특히 후계자인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이 젊은이(this young man)’으로 표현한 뒤 “비교적 검증되지 않았고 북한을 장악하는 데 여러 도전이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음. 그는 이밖에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 “동계 훈련기간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훈련이 연례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윌러드 사령관은 최근 아시아지역 미군배치 변화와 관련, “현재 군사력이 동북아시아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면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를 원하고 있으나 상주기지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말했음. 그는 또 “미중관계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양국의 군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혀 중국과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음.



● 정부, 미군범죄 초동수사 강화방안 협의본격화(1/29)

-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의 형사분과위 회의를 통해 미국측과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 강화방안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하고 있음.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기소 전 신병인도 문제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내 여러 의견을 미측에 문서로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미측이 현재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미측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초동수사 강화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된 개선안을 미측에 전달했으며 미측도 원칙적으로는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SOFA 운영개선 협의를 통해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의한 것을 한미 SOFA에도 준용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현재 한미 SOFA(22조5항)는 살인·강간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점을 검찰 기소 후(현행법일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SOFA 부속문서(합의의사록)에는 ‘미국은 특정사건에 있어 한국의 구금인도 요청에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이런 표현을 미일 SOFA처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임.
- 정부는 또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소한다’는 한미간 합의사항도 개선할 방침임. 신병을 인도받은 뒤 하루 만에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임. 이밖에 정부는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증거규정 등에 대한 조항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정부 당국자는 “미측도 미군 피의자의 인권보장 문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한미간 협의를 마치고 이를 합동위 의사록 등의 형태로 문서화하려면 앞으로 두세 달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나. 한·일 관계

● 정부, 日외무상 독도 발언 철회 촉구(종합)(1/25)

- 정부는 25일 독도 문제와 관련 “할 말을 하겠다”는 일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 철회를 촉구했음.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겐바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 강력히 항의하며 이러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겐바 외무상은 전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한국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 그의 발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이를 강화하는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할 말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음. 조 대변인은 “겐바 외무상이 전례 없이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내세운 점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누차 표명해 온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음. 그는 “독도는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언제나 자유롭게 왕래하는 우리의 영토로,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기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주한일본대사대리)를 불러 겐바 외무상의 독도 발언에 대해 항의했음. 김 차관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일본 외교를 책임지는 외무상이 독도 문제를 놓고 묵과할 수 없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가네하라 정무공사는 한국의 입장을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음.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향후 한일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정부 당국자는 “한일관계는 일본군 위안부, 독도 영유권, 동해 표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의 질곡에 빠져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일본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日 총리 “독도 발언 철회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1/27)

- 일본 외무상의 독도 발언에 대해 한국이 철회를 요구하자 일본 총리가 나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6일 오후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겐바 외무상이 외교 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며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음.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의원이 “한국측이 발언 철회를 요구한 게 사실이나”고 묻자 노다 총리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임.
- 노다 총리는 또 “다케시마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18일 일한(한일) 정상회담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일한 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국적 관점에서 노력하자’고 말했고, 그에 앞서서 겐바 외무상이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에게 한국 국회의원의 방문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고위급 회담을 포함해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측의 일련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외교적으로 노력하



겠다”고 덧붙였음. 앞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한국에) 전하겠다”고 발언하자 한국 정부는 25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음.

● 日 도쿄, 고교 교과서에 ‘韓 독도 불법 점거’ 주장(1/27)

- 일본 도쿄도가 올 4월부터 필수적으로 가르치기로 한 공립고교 일본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전날 도쿄도가 만들어 고교에 나눠줄 ‘에도(江戸도쿄의 옛 명칭)에서 도쿄로’라는 일본사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관한 기술을 포함했다고 밝혔음. 교과서에 포함한 부분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 다케시마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센카쿠 열도는 중국이 국제법상 유효한 근거 없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임.
- 도쿄도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표현을 굳이 일본사 교과서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 “일본이 직면한 과제를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음.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지리와 역사 관련 3과목 중 세계사만 필수 과목으로 정해놓았으나, 도쿄도는 2012년 4월, 가나가와현은 2013년 4월부터 일본사를 필수화할 방침임. 도쿄도 등의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의 검정도 받지 않는 만큼 앞으로 독도 등에 대한 표현이 한층 거칠어질 개연성이 있음.

● 日 여행사, 동해 병기 가이드북 판매 중단(1/29)

- 일본 여행사 대기업이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한 한국 여행 가이드북(안내서)을 일본 내 서점에서 팔다가 항의를 받고 중단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음. 여행사 JTB는 지난 26일부터 ‘JTB 캔(Can) 북스 한국 철도 여행’이라는 일본어 여행 가이드북의 판매를 중단했고, 30일부터 서점 등에 있는 약 1천 부를 회수할 예정임. 이는 책안에 포함된 한국 지도에 ‘동해(일본해)’라는 표기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지난 23일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20여 건의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JTB 관계자는 “책의 성격상 한국 철도청의 자료를 다수 사용하다 보니 특별한 의도 없이(‘동해’ 표기가 병기된 지도를) 게재했다”며 “일본 정부의 견해 등에 비춰볼 때 적절한 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 캔 북스는 세계 각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여행 가이드북으로 사진과 지도가 다수 포함돼 있음. 160쪽 분량인 ‘한국 철도 여행’ 편은 2005년 1월부터 이달까지 약 7천 부가 팔려나갔음.



다. 미·중 관계

● 〈中, 티베트 ‘총격’ 사태로 美와 신경전〉(1/25)

- 중국 쓰촨(四川)성 간쑤 티베트자치주에서 지난 23일 시위대에 대한 현지 공안의 총격 사건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 중국 당국은 총격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총격 사태 보도를 언급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음. 놀런드 대변인은 그러면서 “티베트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 또는 그의 대표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음.
- 미국 일각에서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미 때 이번 총격사태를 포함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미 국무부의 우려 표시에 앞서 중국 정부는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으로 “외국 분리주의 단체들이 사건을 왜곡하고 중국 정부의 신임을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그런 행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중국은 이번 사건이 춘제(春節·설) 당일인 23일 낮 12시 즈음에 티베트자치주 루훙현 거리에서 승려 3명이 분신을 시도하려 했고 그에 자극받아 100명 이상의 군중이 흥기를 들고 모여 경찰서와 상점을 부수는 폭력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폭력 사태에 중국 정부가 정당한 법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경찰관도 5명이 다쳤다는 설명임. 사회 질서를 깨고 불안을 조성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는 것임.
- 그러나 미국은 티베트인의 종교 자유 요구 시위에 대해 중국 당국이 ‘총격’ 대응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영국과 미국에 각각 본부를 둔 국제 티베트운동(ICT)과 자유티베트 등의 단체들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당일 루훙현에서 시위대가 수천명에 달했고 중국 공안이 그 행렬에 총을 쏘아 수명이 숨졌으며 4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사망자 수와 관련해 단체에 따라 6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시위대 사망자 1명의 이름은 ‘포포(Popo)’로 알려졌음. AFP 등의 외신에 따르면 루훙현에서는 현지 공안의 명령으로 티베트인의 외부 출입이 금지됐고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음.
- 국제사회는 지난해 3월 쓰촨성 티베트족자치주인 아바(阿坝<土+霸>)현 소재 키르티(거얼당·格爾登) 사원의 승려 핑취(彭措) 분신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사건까지 모두 16명이 분신을 시도한 데 이어 이번 루훙현 사건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루훙현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 중국이 “내정간섭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방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라. 미·러 관계

● 러' 주재 美대사 反푸틴세력 회동에 의회 반발(1/25)

- 마이클 맥폴(48) 신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반대세력 지도자들과 만난 것과 관련, 러시아 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여당 통합러시아당의 간부들은 24일(현지시간) 하원 회의에서 맥폴 대사가 최근 반(反)푸틴 활동기들과 회동한 데 대해 러시아 내 혁명을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했음. 통합러시아당의 안드레이 이사예프는 미국의 맥폴 대사 임명과 이들의 만남을 들어 “미국 대표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전례 없이 공개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행동한다”고 꼬집었음. 또 맥폴을 만난 의원들의 의회 발언권을 새 선거가 열리는 오는 2016년까지 박탈하고 공식적인 윤리위원회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음.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당수는 맥폴과 만난 민주주의 활동기들과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지도를 받으려고 했는가? 아니면 돈을 받으려고 했는가?”라고 비꼬며 “전시(戰時)라면 이는 국가 배반행위와 다름없다”고 규탄했음.
- 앞서 맥폴 대사는 러시아 외무부와 외교의례 회의를 마친 다음날인 지난 17일 반푸틴 야권 인사 및 시위대와 만났음. 는 이 회동이 논란을 일으킬 줄 몰랐던 듯 당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만남은 미국의 ‘양방향 참여(dual track engagement)’ 전략의 일부”라며 “러시아를 방문하는 모든 고위관리는 현지 정부관리들과 시민사회 지도자들 모두와 만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러시아 TV방송 ‘제1채널’은 황금시간대 편성된 논평을 통해 맥폴 대사가 “혁명을 조장하려는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즉각 비난했음. 인터넷서널헤럴드트리분(IHT)에 따르면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의 칼럼니스트는 다음날 기고문에서 맥폴 대사의 임명이 “음모와 법정 모의에 대사의 참여가 일반적인 일이었던 18세기로의 회귀를 시사한다”고 꼬집었음. 주말새 다른 채널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평들이 방송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음. 이로써 맥폴 대사는 부임 초기부터 불길한 시작을 하게 됐음.
- 전문가들은 맥폴을 겨냥한 러시아 언론과 의회의 공격에 대해 자국에 대한 비판을 삼가라는 미 정부를 향한 러시아 정부의 메시지를 꽤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음. USA-캐나다 연구소의 비크토르 크레메뉴크는 “이는 러시아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선전(善戰)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려고 고안한 것”이라고 풀이했음. IHT는 이번 사건을 미국과 러시아 정부의 관계가 얼마나 취약하고 허술한지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전했다.

● “푸틴 집권해도 美-러 협력관계 변화 없을 것”(1/25)

- 오는 3월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당선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마이클 맥폴(48) 신



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25일 밝혔음. 맥폴 대사는 이날 현지 유력 일간 신문 ‘코메르산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푸틴과(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며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같은 관계가 단절될 것이란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순 부임 직후 러시아 야권 지도자들과 면담한 일로 현지 친(親) 정부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는 맥폴 대사는 푸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벼락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과 만난 적이 있으며 두 지도자의 조찬 회동은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됐다”며 “이는 오바마가 세계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였다”고 평가했음.

- 맥폴 대사는 또 “푸틴은(총리로 재임한)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지도부의 일원이었으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접촉할 때도 우리는 그가 전체 러시아 지도부를 대신하고 있음을 염두에 뒀다”며 “이런 과정이 지속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맥폴은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야권 인사들과의 회동과 관련, 이 만남은 자신이 아니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주도한 것이며 자신은 단순히 배석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 내가 부임 후 처음으로 야권인사들과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나의 첫날 업무는 러시아 외무부에 신입장 사본을 제정하는 일이었으며 이후 온종일(러시아 정부의) 공식 인사들과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튿날 번스 부장관을 수행해 러시아 시민사회 대표 및 야권 지도자들과 만났지만 이는 대사로서의 임무였다”며 “면담은 번스 부장관이 주도했으며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로 듣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 맥폴은 그의 주러 대사 임명이 러시아의 ‘색깔혁명(민주시민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일부 지적에 대해 “이는 완전한 넌센스”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리셋 정책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나를 보냈으며 리셋의 의미는 혁명을 준비하는 데 있지 않으며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유명 블로거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나발니가 미국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얘기는 헛소리”라고 일축하고 “나발니는 우리로부터 어떤 돈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그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맥폴 대사는 러시아 외무부와 외교 의례 회의를 마친 다음날인 이달 17일 반정부 야권 인사 및 시위 주동자들과 만난 바 있음. 이에 대해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간부들은 24일 그가 러시아의 혁명을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했음. 러시아 TV방송 ‘제1채널’도 앞서 황금시간대에 편성된 논평을 통해 맥폴 대사가 “혁명을 조장하려는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비난했음.



마. 중·일 관계

● <中, 日외상 ‘양국관계 강화 발언’에 화색>(1/25)

- 중국이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음. 25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전날 겐바 외상이 올해 외교방침 연설에서 “중국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일제히 보도했음. 이들 매체는 겐바 외상이 “올해가 일·중 양국 간에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으로 공통의 전략적 이해에 바탕을 둔 상호 호혜관계를 심화시켜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음. 겐바 외상은 지난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할 말은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 눈길을 끌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일본 외상의 발언이 실질적인 중·일 외교관계 강화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음. 중국과 일본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센카쿠<尖閣>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해 말부터 중국이 일본에 ‘화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임. 특히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26일 방중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과 회동한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발생하면서 중일 양국 간에 ‘협력 모드’가 조성돼 가는 분위기임.
-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일본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댜오위다오 기습 방문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도 예전과는 달리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함.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도자로서 복귀를 선언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본 역시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음.

● 中관영언론 “원자로 사고 日보도, 사실 아니다”(1/26)

- 중국 베이징(北京) 교외에 있는 실험고속원자로(CEFR)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중국 관영언론이 26일 보도했음.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완강(萬鋼) 중국원자력과학연구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확인했음. 완 원장은 “해당 실험원자로의 설치 공정이 지난해 7월 1단계 목표에 도달했고 올해 2분기 중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가동도 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인민일보가 전했음. 완 원장은 “현재 안전감독기구가 해당 원자로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더불어 운영인원 역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중이고 공정마다 안전수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면서 “실험고속원자



로의 안전성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 실험고속원자로는 중국원자력과학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것임. 중국은 지난 2010년 10월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의 일종인 고속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실험고속원자로를 베이징 서쪽 교외에 건설해오고 있음. 중국은 자국의 실험고속원자로가 미국·독일·러시아·일본 등이 운용한 적이 있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을 도입, 제3세대 원전이 1% 수준인 우리나라 이용률을 60%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음.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25일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조사를 인용해 베이징 교외 실험고속원자로가 작년 7월 발전을 시작한 가운데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출력 2만kW의 실험로 발전기가 설치된 건물 안에서 문제가 생겼고 중국 당국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음. 아울러 해당 실험고속원자로는 후쿠이현 쓰루가시의 고속증식로 ‘몬주’처럼 열을 식히는 냉각재로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바. 일·러 관계

● 러시아-일본 비자 간소화 협정 체결(1/28)

- 러시아와 일본이 상대국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28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이 같은 협정에 서명했음. 협정에 따라 양국은 3년짜리 복수비자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90일 이하 사업비자 신청 시 초청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음. 현재 러시아와 일본은 경제 협력 관계가 활성화돼 있음에도 상대국을 찾는 방문객은 연 12만~15만 명에 그치고 있음.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300억 달러 수준이었음
- 양국 외교 수장은 이날 회담에서 두 나라의 협력 관계 강화를 가로막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와 평화조약 체결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2차대전 후 러시아가 차지한 쿠릴열도를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평화조약 체결 문제와 관련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서로 다르지만 침착한 분위기에서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공개적 발언을 삼가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토문제 진전은 양국이 사전조건과 일방적 역사 해석에서 탈피할 때 가능할 것이라며 영토 분쟁과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다룰 양국 역사 학자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음. 라브로프는 이어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 협상 일정이 러시아의 3월 대선이 끝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에 겐바 외무상도 “(평화조약과 관련) 서로간에 큰 견해차가 있지만 이 문제를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침착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겐바는 이어 쿠릴열도에서 러시아와 공동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떤 활동이 4개 섬의 영유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의 법적 지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금까지 북방영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며 이곳에서 공동경제활동을 벌이지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해 온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됨.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순방의 일환으로 이날 일본을 방문했음. 한편 이날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도쿄의 외무성 청사 주변에선 쿠릴열도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인들의 시위가 벌어졌음.

사. 기 타

● 티베트 이틀째 유혈시위...中 충격대응 확인(종합)(1/25)

- 중국에서 임진년 설 벽두부터 대규모 티베트 시위가 두 차례 발생했다고 티베트 인권단체들과 중국 당국이 공식 확인했음.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현지소식통과 티베트 단체들을 인용해 쓰촨(四川)성 간쑤 티베트자치주 루취현에서 춘제(春節·설) 당일인 23일에 이어 24일 부근 써다(色達)현에서 시위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음. RFA는 써다현에서 중국 공안이 시위대에 충격을 가해 최소 2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음. 아울러 해당 지역의 호텔과 상점 폐쇄 명령에 이어 모든 활동이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 룽상 상가이(43)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는 “유혈사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개입해달라”고 호소했음. 그는 “국제사회가 침묵하는 것은 중국에 티베트의 긴장 상황을 다루는데 역압적이고 폭력적인 조치가 수용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써다현에서의 충돌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태가 이미 진정됐다고 밝혔음. 그러나 추가 시위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가운데 신화통신은 24일 새벽과 오후 두 차례 루취현 사태를 보도하면서 중국 당국의 충격 대응 여부는 전하지 않았으나 25일에는 총기



사용을 확인했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도 24일 이례적으로 루훙현에서의 충돌 상황을 전하면서 폭도들의 폭력행위를 현지 공안이 법질서 차원에서 엄정 대응했다는데 초점을 맞췄음. 그러나 총기 사용을 거론하지 않았었음. 중국 정부가 애초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 총기사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려 했다가 티베트 인권 단체들을 통해 총기 사용이 '확인'되자 시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신화통신은 써다현 사건과 관련, 현지 경찰이 설득작업과 함께 치명적이지 않은 무기로 폭도를 해산시키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총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서 구체적인 무기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시위대도 발포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경찰관 14명이 부상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음.

- 이와 관련해 빅토리아 놀랜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총격 사태 보도를 언급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음. 미국 일각에서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미 때 이번 총격사태를 포함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쓰촨성의 티베트자치구인 아바(阿坝〈土+霸〉)현 등에서는 지난해 3월 평취(彭措) 승려 분신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14일까지 1년도 채 안 돼 16명이 분신을 시도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국제티베트운동(ICT)과 자유티베트 등의 단체들이 시위대가 수천 명에 달했다고 전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총기를 사용하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 자칫 대규모 유혈 사태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러 메드베데프 “러는 亞와 유럽 잇는 최단 루트”(1/29)

-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APEC 가맹국 신문에 기고문을 보내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루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9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보낸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러시아는 성장을 지속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떼어낼 수 없는 일원이다”라며 “특히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성장에서 (러시아가 아태 지역의 일원이라는) 의의는 분명하다”고 밝혔음. 그는 특히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루트이며, 우리의 수송 경로를 이용하라고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한 뒤 “러시아의 수송망을 근대화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관심 있는 관계 국가와 대화할 생각”이라고 제시했음.
- 메드베데프는 또 자유무역 교섭에 대해 “우리는 관세 동맹을 맺은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스와 함께 APEC 가맹국과의 자유무역 교섭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고, 에너지 자원의 무역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전 보장이나 녹색 성장,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와 테러·국제범죄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이번 기고문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쓴 것



으로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쪽으로의 경제 통합’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아시아신문은 전했다. 러시아는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필리핀·美, 3월 군사협력 고위급 회담(1/29)**

- 미국과 필리핀이 실무급 협상에 이어 오는 3월 국방·외교 분야 장관급 회담을 다시 열고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음.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후속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필리핀 측에서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외교장관과 볼테르 가르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라고 필리핀 현지 언론과 외신이 29일 전했다. 양국은 막대한 경제적 이권이 걸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 중국의 부상을 공동 견제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앞서 26~27일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보급 협상에선 필리핀 내 미군의 순환제 배치 확대, 공동 군사훈련 빈도 확대 등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음. 필리핀 당국은 병력이 주기적으로 순환되거나 일시적인 주둔으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라면 더 많은 미 지상군과 해군 함정이 필리핀에 머물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볼테르 가르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확대된 지역 내 미군의 존재는 필리핀의 영토 침범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음. 다만 그는 현행법으로 금지된 미군의 재주둔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재확인했음. 가르민 장관은 또 정찰용 대잠수함 초계기인 ‘P-3C 오리온’을 미국으로부터 임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안 전투함 등의 추가 배치도 협상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필리핀 시위대 100여명은 28일 마닐라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군 병력 및 해군 함정의 추가 배치 방안에 거세게 항의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